

GMO 표시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글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 명예교수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임시 본회의에서 GMO(유전자변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를 확대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GM원료가 함량 5순위 이내일 때만 표시 의무화'에서 함량과 관계없이 'GM식품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 의무화'로 바뀌었다. 다만 유전자변형 DNA(유전자)나 이로부터 유래한 단백질이 잔존하지 않을 땐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은 바꾸지 않았다. 식품에 GM성분이 남아있지 않으면 관리기관이 검사해도 GM원료 사용 여부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 세계 경작지의 12%에서 GM작물 생산

GMO 표시제도는 20여 년 전 GM농산물이 처음 상업화됐을 때 유럽의 그린피스(Greenpeace)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GMO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GMO 반대론자들에 의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전 세계로 확대·재생산되면서 GMO에 대한 불안감과 반대여론이 커졌다. 그러나 과학계의 꾸준한 생명공학 연구와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의 노력으로 GM농산물의 안전 관리와 유통질서가 확립되면서 차츰 제 자리를 찾아갔다. 요즘은 GM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이 탄력을 받고 있다. 대규모 농사에 필수적인 제초제·병충해 저항성 GM종자(씨앗)들이 개발됐고 미국·캐나다·아르헨티나·브라질 등 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GM종자 사용이 급속히 늘었다. 2014년 전 세계의 GM작물 재배면적은 1억 8150만ha(헥타르)로 세계 전체 경작지의 12%에 달한다. 세계 콩 재배면적의 79%가 제초제내성 GM콩으로 교체됐다. 옥수수 재배면적의 32%에서 병충해내성 GM옥수수가 재배되고 있다. GM작물은 노동력은 크게 줄일 수 있으면서 적은 농약으로도 많은 수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점이다. 유럽의 과학자단체가 147개의 GM관련 연구논문을 메타분석(meta analysis)해 발표한 최근의 보고서에서 따르면 지난 18년간의 GM작물 재배로 수확량은 22% 증가, 농약 사용량은 37% 감소, 농가수익은 68% 증가했다.

● GMO 표시제도 확대의 손익 계산서

생명공학 기술의 선두주자로 GM종자 생산을 주도하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옥수수의 90% 이상은 GMO다. GM곡물을 아무 표시 없이 지난 20여 년 동안 먹은 미국 국민에서 부작용 사례는 한 건도 발표된 게 없다. 과학계가 주장해 온 '동등성의 원리'에 의한 GMO의 안전성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GMO 표시 제도를 확대·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대부분의 식품은 가공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소멸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규에 의해 추가로 GMO 여부를 표시해야 할 식품도 그리 많지 않다. GMO 표시제도 확대가 소비자의 불안감만 높이면서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일본도 GMO 표시 제도를 확대하지 않았다.

● '한림원의 목소리' 발표

국내 과학계 최고 권위자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지난해 12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창조농업혁신을 촉구하는 '한림원의 목소리'를 발표했다. 과학적 판단에 근거한 생명공학 신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계가 적극적으로 홍보·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선 생명공학 기술의 실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